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선동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 10. 19(금)	담당자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문의	784-8971~3		박필동 보좌관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제대로 된 평가 필요하다

- 캄교 수도권 인원 제한 묶여 전체 인력 18.5% 서울·경기에서 전체 업무 54% 처리
- 예탁원 수도권 잔류인원 편법 운용 정원 증가해도 부산본사 55%, 서울 45% 인력 유지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014년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이후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도권 인원 제한에 묶여 전체 인력 18.5%인 서울·경기 인력이 전체 업무의 51%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서울사무실도 역삼동과 도곡동에 2개를 두면서 업무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편법을 사용하여 늘어난 정원을 수도권 업무 추진에 주로 배치시키고 있으며, 사장, 전무, 감사 등 6명은 부산에서, 예탁결제본부장, 투자지원본부장, 국제·펀드본부장, 전자증권추진본부장 등 핵심사업 임원 5명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컨설팅회사인 지엔(Z/Yen)그룹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 평가 결과 서울은 2015년 6위에서 올해 33위로 급전직하, 부산도 2015년 24위에서 올해 44위를 기록하며 하향평준화 중이다.
- 상황이 이러하데 금융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경쟁력 향상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 2014년 금융위 산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부산과 대구로 지방이전을 완료하였는데 지방균형 발전과 경쟁력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도 없는 상태에서 신설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미이전기관이었던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방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18년 현재 서울사무실에 홍보실, 종합기획부, 전산실 3개부서 10명을 제외하고도 6개부서, 필수인력 83명이 근무하고 있다.
- 가계자활지원부, 기업지원총괄부, 기업혁신지원부, 기업구조개선행, 국유개발2부, 공유개발부 등 본사 핵심업무가 서울사무실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타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서울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표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수도권 인력 변동 현황

구분	2014년 말		2018년 8월		증감	증감사유
	근무부서	인원	근무부서	인원		
서울 사무실	홍보실	1	홍보실	3	2	국민홍보 강화
	종합기획부	1	종합기획부	4	3	국회협력 강화
	정보시스템실	2	정보시스템부	3	1	서버관리 강화
	경영지원부	6	-		-6	해당업무 지역본부로 이관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3	-		-3	국민행복기금 업무 서민금융 진흥원 이관
	온비드사업부	3	-		-3	온비드시스템수도권업무종료
	채납징수실	28	-		-28	해당업무 지역본부로 이관
	서민자활지원부		가계자활지원부	5	5	취업지원 상담창구 관리
	자산인수기획부		기업지원총괄부	4	4	기업자산 시설·임대 관리
	자산인수기획부		기업혁신지원부	16	16	기업혁신지원업무
	채권인수부		기업구조개선행부	5	5	금융기관 대상 기업채권인수
	국유개발부		국유개발2부	25	25	국유재산 개발건축업무
	공공자산개발부		공유개발부	28	28	공유재산 개발건축업무
	소계	44	소계	93	49	
수도권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105	서울동부지역본부	65	-40	부실채권, 조세, 국유지관리 등 업무량 반영
	서울국유재산부	64	서울서부지역본부	65	1	
	경기지역본부	69	경기지역본부	62	-7	
	소계	238	소계	192	-46	
수도권 총계		282		285	3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 문제는 지방이전시 수도권 잔류인원을 291명으로 못박아 두면서 달라진 업무여건에 비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 2014년 국토부 지방이전 계획 확정 당시 캠프 임직원 911명 중 서울·경기 잔류 인원을 291명으로 확정하면서 이를 준수 중이다.
-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처리해야 하는 본사업무가 늘어 서울사무실 인원은 49명 늘렸는데 수도권 잔류인원 숫자를 맞추기 위해, 수도권지역본부 인력 46명을 감소시키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꺾다’는 식의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전체 인력의 18.5%에 불과한 서울·경기 임직원이 캠프 전체 업무의 54%를 처리하고 있었다.

<표 2>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별 업무량 현황

분 야		서울·경기	비수도권(인천 포함)
가계지원부분	신용회복	36%	64%
	서민금융(바꿔드림론)	51%	49%
	자활지원(취업지원)	56%	44%
기업지원부분	기업혁신(상담)	64%	36%
	세일앤리스백	43%	57%
국공유개발 및 국유지관리	개발건축	68%	32%
	임대관리	70%	30%
	국유지관리	45%	45%
평 균		54%	45%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 전국 국공유개발 임대관리 업무 70%, 개발건축 68%, 기업혁신 상담 64%에 해당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서울·경기 인력충원이 필요함에도 수도권 잔류인원 숫자 제한 때문에 캠프 인력이 1,205명에서 1,543명으로 338명(28%) 증가할 때, 서울·경기 인력은 단 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표 3> 한국자산관리공사 최근 5년간 정원 및 현원 증감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8월
정원(명)	1,320	1,328	1,363	1,518	1,640
현원(명)	1,205	1,242	1,286.5	1,456.5	1,543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 2014년 대비 2018년 서울·경기지역 인원 증가 3명(282명 → 285명)

- 인력운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역삼동의 서울사무실과 별도로, 올해 도곡동 캠프양재센터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새롭게 만들면서 부산본사와 서울사무실 업무가 분산되고, 서울사무실 업무조차도 별도 사무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 도곡동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혁신지원부 개인당 사용 면적은 15평으로 정부부처 차관보실 크기와 맞먹고 있다.

- 회의실, 세미나실, 상담실까지 포함된 면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사무실이 분산되면서 업무공간까지 중복되고 있는 것이다.

<표 4> 부산 본사 외 서울사무소의 복수사무실 사용부서 현황

부서명	서울사무소 면적(m ²)	근무 인원	1인당 면적(m ²)	1인당 평수	복수사무실 설치 사유
가계자활지원부	91.43	5	18.3	5.5평	취업지원창구(서울)
기업지원총괄부	99.26	4	24.8	7.5평	인수자산 시설관리(서울)
기업혁신지원부	806.35	16	50.4	15.3평	기업혁신지원(서울양재타워)
기업구조개선행부	99.26	5	19.9	6.0평	기업채권인수(서울)
국유개발2부	395.44	25	15.8	4.8평	국유재산개발(서울)
공유개발부	395.44	28	14.1	4.3평	공유재산개발(서울)
홍보실	65.43	3	21.8	6.6평	대외홍보(서울)
종합기획부	91.43	4	22.9	6.9평	대외협력(서울)
합계	2044.04	90	22.7	6.9평	

* 서버관리를 위한 서울전산실(395.44m²) 근무인원 3명 제외

** 「정부청사 관리규정」 사무실 면적 기준 : 정부부처 차관보실(50m²), 국장실(33m²), 5급 기관장실(17m²), 5급 사무관(7m²)

*** 기업혁신지원부의 경우 서울사무실과 별도로 서울양재타워 2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의실, 세미나실, 상담실 포함 면적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방이전계획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인력운용을 하고 있다. 핵심금융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존속이 필수적이었고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체 인원의 45%나 되는 인력이 남게 되었다.
- 2014년 지방이전 당시 예탁원 서울잔류 인원은 231명이었고, 289명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사무실 인원은 53명 증가한 284명이다.
- 대면 비즈니스 업무 증가에 따라 서울사무실 인원도 자연스럽게 증가되었으나, 정식절차대로라면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계획 변경승인을 거쳐야 한다.
- 예탁원은 지방이전 당시 서울잔류인원 비율이 45%여서 기준에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나, 지방이전 확정시 부산이전인원 289명만 정해졌을 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절차 필요하다.
-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인 예탁원의 업무가 부산본사와 서울사무소로 대등하게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간부급 임원만 하더라도 2018년 서울사무실에 3명이 증가하였는데, 사장, 상임감사, 전무이사, 전략기획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일자리창출본부장 등 6명은 부산본사에서,

IT본부장, 예탁결제본부장, 투자지원본부장, 국제·펀드본부장, 전자증권추진본부장 등 예탁원 핵심업무 담당 간부 5명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 인적자원개발부, 총무부, 홍보부 등도 수도권지역 업무 증가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전자증권, 증권예탁·파이낸싱, 펀드서비스 조직은 서울에서만 업무를 보고 있다.

<표 5> 서울 잔류부서 기준 지방이전 이후 인원 증가 내역 및 사유 현황

부서	인력배치('18)		증감인원 (서울)	서울인원 증감사유/부서 신설사유
	부산	서울		
임원실	1	5	3	본부 신설 등
감사부	6	3	0	
경영전략부	19	0	-1	대관업무 부산 이전
고객행복센터	5	3	2	수도권지역 고객 지원업무 증가
IT인프라운영부	0	17	7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업무 증가
IT전략부	38	0	-12	비즈니스부 IT전략부(부산) 편입
IT서비스부	28	20	6	잔류대상 조직 IT지원 업무 증가
증권예탁부	0	31	5	수도권지역 고객 지원업무 증가
권리관리부	0	14	-3	일부 기능 부서 이관
증권등록부	4	12	-3	일부 기능 부산 이전
증권파이낸싱부	0	20	3	경쟁비즈니스 업무 증가
증권대행부	0	22	-2	조직 축소
펀드서비스부	0	22	12	경쟁비즈니스 업무 증가
글로벌서비스부	12	9	-9	일부 기능 부산 이전
펀드업무부	18	9	1	
인적자원개발부	26	14	5	수도권지역 경영지원업무 증가
총무부	18	18	14	수도권지역 경영지원업무 증가
홍보부	5	6	3	수도권지역 경영지원업무 증가
재무회계부	16	0	-1	일부 기능 부산 이전
신 설 조 직	전자증권개발지원단	0	22	전자증권시스템 개발(수도권 소재 금융회사 및 개발업체와 협업 필요)
	전자증권개발사업단	0	19	
	의결권서비스부	0	8	대면 접촉 및 당일 시한성 업무 등 처리, 경쟁업무
	중소성장기업지원	0	11	대면 접촉 및 당일 시한성 업무 등 처리
합계	196	285	90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2018년 8월말 기준)

* 간부급 임원 6명 부산 근무(사장, 상임감사, 전무이사, 전략기획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일자리창출본부장), 5명(IT본부장, 예탁결제본부장, 투자지원본부장, 국제·펀드본부장, 전자증권추진본부장) 서울 근무

** 2014년 대비 2018년 서울잔류부서 기준으로 증가 인원은 121명, 부산본사 이전 인원 31명으로 순증 90명

- 김선동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순환논법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을 준비도 없이 밀어 붙였던 것처럼 복잡다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균형발전이라는 단순 논리로 포장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2014년 이전된 금융공공기관의 지역 정합성, 균형발전의 분산효과, 고용창출 효과도 따져봐야 하고, 기능에 따른 서울잔류부서와 이전부서 배치의 효율성 평가부터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에 별도 이전기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강조했다.